

저출산 극복, 생애주기에 기반한 촘촘한 지원과 부모와 아동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백선희 소장

2017년 8월 통계청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40만 6,243명의 아기가 출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 출생아수 43만 8,420명 보다 약 7.4%(3만 2177명)가 줄어든 수치이며, 2017년에는 이보다도 적은 약 36만명의 아기가 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02년 한 해 출생아수가 49만명 대로 줄어든 이후 15년만에 40만명 대의 출생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국의 기준인 합계출산율 1.30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조의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은 고사하고 1.30명 회복조차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대북 문제 만큼이나 저출산의 지속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도 뚜렷하지 않지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 더욱 답답하다.

이에 새로운 계획과 정책이 발표될 때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좀 더 새롭고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는데, 약 10년 전부터 수립되어 온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의 경감, 일-가정양립 부담의 경감에 초점을 두었다면, 2016년 새로이 수립된 제3차 계획에서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문제 해결을 직접적인 출산·양육기의 가구 대상에서 생애주기적으로 확장한 문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3차 계획에서는 출산의 전제가 되는 청년층의 결혼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혼의 장벽이 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 문제 해결,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의 부담 경감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며, 자녀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중 영유아기를 벗어나면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 되며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도 포함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과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의 표면적인 장벽일 뿐 아니라 전 국민에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에서의 삶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았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청춘의 시기에 연애와 사랑이 사치가 되고,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어 가정을 꾸릴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결혼과 출산을 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층의 취업과 결혼부터 시작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촘촘한 지원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는 여전히 망설여진다. 이는 결혼과 부모됨을 지원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근간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이 과연 결혼과 출산, 양육을 가치 있게 바라보며 존중하는가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출산과 자녀 양육의 수고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인지, 남의 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지 먼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임산부가 임산부지정석에 눈치 보며 앉아야 하고, 엄마가 ‘맘충’으로 불리며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 자녀를 데리고 택시 잡거나 버스 한번 타기 어려운 사회라면, 굳이 자녀를 낳아 편안한 삶을 포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러한 사회라면 ‘다자녀 지원’ 정책이 있다 해도 다자녀 출산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겠다. 진정성에 기반한 정책이 철저한 요구 분석을 통해 촘촘히 설계될 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초저출산 탈피 및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기대하며,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국정과제를 통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을 목표로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론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과 책임을 기꺼이 감내한 이 시대의 부모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분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조성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또한 가능하다면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 자녀연령별 양육 단계등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옛말처럼 정책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지금의 대책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국가적 관심과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세대의 관심과 신뢰 회복을 기대해야 할 바가 더 큰 부분이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이미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혼의 경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나,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마련된다면 점차적으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나아가서는 단지 저출산 해소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전국민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단지 결혼과 출산 장벽 제거로 출산을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매몰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국민의 시대, 문재인 정부에 기대한다.